



국내·외 축산소식



사료 곡물 국제시세 ‘경중’ 국내 사료가격 인상 ‘예고’ 수출국 재고감소 불구 수요는 늘어

옥수수·밀 등 배합사료 원료 곡물의 국제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사료업계에 따르면 배합사료 원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밀의 국제시세가 올 연초보다 55%, 68% 올랐다.

옥수수의 경우 1t당 국제시세는 지난 1월 135달러 수준이었으나 8월에는 165달러, 11월10일 현재 2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또 밀 1t 가격도 올해 초 125달러에서 현재는 210달러 수준으로 크게 인상됐다.

업계는 지난 여름 이상 폭염으로 곡물 작황이 저조해 미국 등 수출국들의 곡물 재고량이 크게 줄었으나 사료용 곡물 수요는 오히려 증가, 가격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 재고율은 지난해 20.2%였으나 현재는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곡물값이 이처럼 오르는 것에 대해 축산전문가들은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배합사료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제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은 사료값을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사료업계의 관계자는 “그동안 원화 가치 상승으로 사료 원료값 인상에 따른 손실분을 만회해왔는데, 이제는 경영압박을 피할 수 없어 업체마다 가격을 소폭 인상했다”며 “당분간 국제 곡물시세는 내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국제곡물가 폭등에… 사료시장 위축

배합사료업계가 사료원료가격 폭등에다 사료시장 위축까지 겹쳐 ‘이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경우 160~170달러하던 국제가격이 2백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조만간 2백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까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초에는 사료값 인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미FTA 협상 등 국내 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 인해 축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사료시장도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업계는 시장 돌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배합사료업계는 이를 위한 방



안의 일환으로 실증을 통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산신문]



유럽에서 '광우병 쇠고기' 대량 리콜 사태

유럽이 또다시 광우병의 공포에 휩싸였다.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가 '누군가의 실수로' 영국 전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까지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레코드>는 11일 "쇠고기 협동조합(THE Co-op) 상점들에서 파는 다양한 종류의 쇠고기 제품이 전량회수(리콜)에 들어가거나 가판대에서 치워졌다"면서 "이와 관련된 쇠고기를 산 소비자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스다(ASDA)에서 팔린 소 간(肝) 또한 전량회수 조치됐다"고 전했다.

문제의 쇠고기는 지난달 25일 영국 북아일랜드에서도 축된 뒤 같은 날 도축된 다른 육류 제품들과 섞인 채 영국 전역은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으로 팔려나갔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만 2000곳이 넘는 쇠고기 판매점들이 리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또 쇠고기 협동조합(THE Co-op)과 아스다는 수천 만 파운드(1파운드=100원)의 쇠고기를 전량회수하는 데 따른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문제의 쇠고기가 30개월령 이상이었는데도 광우병 감염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됨으로써 발생했다. 이미 광우병 파동을 겪은 적이 있

는 영국은 30개월령 이상인 가축은 모두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 협동조합(THE Co-op)의 대변인은 "회사(쇠고기 협동조합)는 정확히 어디서 쇠고기(점점)에 대한 위반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영국 상점들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이런 위반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 예방조치로서 상품을 전량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 관리가 그냥 이 동물의 출생일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의 데이빗 스타텀은 "척수 등 문제가 된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부위는 판매 전에 모두 제거되었으므로 혹시 감염된 제품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러나 광우병 관련 규제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우리는 이런 위반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국장은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쇠고기 리콜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국내 소비자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시스템으로는 문제의 쇠고기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오는 16일께 척 램버트 농무부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쇠고기 협상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방한에서 최근 수입이 재개된 30개월령 미만 소의 순수 살코기 외에 뺏

조각이나 갈비뼈에 대한 수입도 허용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시안]



축분 해양배출비용 또 '인상'

해양배출업체들이 내년 1월1일을 기해 또다시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양돈업체가 강력히 반발, 실력행사를 경고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해양배출업체들이 내년 1월1일부터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마련, 최근 이같은 사실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돈협회 정종극 이천시지부장은 "인상폭은 해양배출업체의 처리비용만 톤당 3천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 가격 인상률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높은 인상률은 그동안 축산업계의 민원을 배경으로 한 해양경찰청 등 관계당국의 압력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가격 변동 회수를 최소화 하되 한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해양배출업체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부 해양배출업체의 경우 가격인상에 대해 언급하며 "내년에는 추가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럴경우 가축분뇨 처리비용(운임제외)은 지난 '05년 해양경찰청의 해양배출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최고 80% 가까이 오르게 된다.

해양배출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쿼터량이 감소한데다 유류대 등 각종 원자재가격과 인건비가 상

승,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양돈업체는 "해양배출업체가 가축분뇨의 일정량은 해양배출에 처리를 의존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생산비 이하의 돈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돈농가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납득할수 있는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 인상을 강행, 상대적으로 '약자'일수 밖에 없는 양돈농가들에 대한 횡포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양돈농가들과 연계, 해당업체는 물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종극 지부장은 이와관련 "만약 인상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가축분뇨 해양배출과 관련, 간단회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을 올림으로써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쿼터량 배정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축산신문]



도축장 HACCP평가 구체화 방침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는 도축장 HACCP 운용평가에 대한 기준항목이 내년부터는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지난 7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도축장 HACCP 운용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올 들어 전국 82개 도축장과 38개 도계장에서 실시한 HACCP 운용수준 평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연맹 이항기 부회장은 “도축장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하게 된 이 평가는 소비자 신뢰제고와 도축장 HACCP 운용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본다”고 자평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및 평가단 조직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만든 평가기준이 시설과 규모면에서 큰 도축장 내지 도계장일수록 조금은 손해 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와 올해 평가방법을 종합평가회를 통해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위해 실제 실험 및 데이터 분석 등의 방법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가대상도 지육과 부산물로 확대하고 결과발표 이후 우수한 성적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날 전문가로는 건국대 수의대 류영수 교수와 충북대 모인필 교수가 나서 도축·도계장 HACCP운용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밝혔다.

또한 토론에 나선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도축장 위생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상위수준에 해당되는 곳에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축산신문]

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9톤 물량에 대한 검역검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통관이 완료가 될 경우 바로 수입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통관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입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수입업체나 수출작업장 모두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입이 본격화 되기 전 국내 유통을 선점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내 수입업체의 경우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출중단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꾸준한 거래를 통해 수출업체와 신뢰를 쌓을 경우 향후 추가수입 시 쿼터를 늘리는 등 좋은 조건을 제시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형 식당가에서는 여전히 미산 쇠고기가 호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높다”며 “국내에 유통이 된다면 분명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관상에 수출중단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입 희망업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도착한 9톤 물량의 검역검사 결과는 이번 주말이나 내 주 초에 나올 계획이다. [농수축산신문]



미산 쇠고기 50톤 추가 수입 움직임

미산 쇠고기 50톤이 추가로 수입될 전망이다. 수입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국산 쇠고기 9톤이 국내에 반입된 이후 해당 작업장에서 50톤의 물량



내년부터 축산가공품 성분 표시 의무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일 관련 공무원 및 업계 담당자 등 2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강당에서 ‘축산물표시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용중

인 '축산물의표시기준' 전반에 대해 관련 공무원 및 업체 담당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지난해 개정사항 및 현재 추진 중인 개정 방향을 교육·홍보코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강연자들은 지난해 9월 23일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물가공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인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소시지류 등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양념육에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의무 표시,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미생물 증식 위험 감소를 위한 조제분유 남은양 처리방법 권고문 신설, 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포화지방·당류 등 영양성분표시 확대를 포함한 영양성분 표시방법 정비 등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양돈업계 '항생제와 전쟁' 선언

대중언론매체들의 '양돈장 과다항생제 투여'에 대한 고발성 보도가 연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돈업계 스스로 '항생제와의 전쟁'을 공식 선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1일 최영열 회장 주제로 '자유무역(FTA)시대 국내 양돈농가 생존전략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돈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와 소모성질환 극복 및 국산돈육 차별화 등 3년간 도출된 3대 현안과제를 3년간에 걸쳐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3·3·3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의 잇따른 항생제 관련보도와 관련, 소비자 불신 심화로 그동안 쌓아온 자조금 사업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항생제와의 전면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 정부와 양돈업계, 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에 착수, 양돈자조금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양돈환경규범' 등 환경자정활동과 연계, 양돈현장에서 항생제 사용 최소화를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대농가 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영열 회장은 "극히 일부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양돈농가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제, "항생제 남용으로 문제를 초래한 농가는 반드시 색출, 양돈업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최회장은 정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항생제 사용을 줄일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은 외면한채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도축장에서의 항생제 잔류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적발농가에 대해서는 '3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양돈업계 스스로 자청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크린팜운동과 양돈환경규범 채택 등 범업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환경자정운동은 물론 항생제 사용 자체 노력 및 성과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짐으로써 양돈산업의 현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대인론 활동 확대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축산신문]